

광양, 고용위기 대응지역 지정...여수·광주 광산 ‘연장’

고용노동부,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의결도, 200억원 투입해 위기 기업·근로자 보호 총력 펼쳐

철강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 광양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도 지정이 6개월 추가 연장 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제도는 고용 사

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지원 시 우대하는 제도다.

광양시는 지역 주요 산업인 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광양시를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던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도 지정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자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5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범위가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되면서, 해당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증설·신설하고 지역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의 1/3~1/2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이날 “철강산업이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유럽의 고율관세로 어려운 상황에서 광양이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되면서 향후 1년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며 “여수 역시 지난해 8월 19일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7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향후 6개월간 고용안정 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남도는 이러한 정부 지원에 발맞춰,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올해 2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의 고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에서 부담하는 근로자 복지비와 신규채용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장을 지키는 일용직·상용직 근로자에게는 문화복지비, 채용기업 맞춤형 교육 참여자에게는 훈련 수당을 지원하는 등 고용안정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위기상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에게 구직활동 수당과 생계안정비, 업종전환 교육과 재취업 상담 등을 통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석유화학·철강산업 특별법’을 통해 4조 6000억원 규모의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고용 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제대응지역 연장과 신규 지정을 발판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산업 전환기에도 안심하고 일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향후 석유화학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새해 소망을 담은 종이비행기 12일 오후 광주 서구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설날 큰잔치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과 심철의 광주시의원, 주민들이 새해 소망을 담은 희망의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국방부 “계엄 관여 180여명 수사 의뢰·징계”

안규백 장관, 헌법준중TF 활동결과 발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명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준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 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원 180여명을 파악해 이 중 114명을 수사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또한 수사대상과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기존 29명이 항소한 상태다.

아울러 특수본은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을 수사해 당시 소속 기준 2기갑여단장 구상희 준장, 국방부 혁신기획관 방정환 준장, 3공수여단장 김종수 준장 등 장성 3명과 방첩사와 수사방사 등 소속 대령 5명까지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중사와 직권남용관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연합뉴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1면 ‘통합시계’서 계속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마무리하려면 이 달 안에 법적 기반을 확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는 6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도 통합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합이 될 경우 통합 단체장 선거구도는 물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판제까지 연쇄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합 단체장 선출 여부에 따라 현직 단체장과 예비 주자들의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결국 통합의 항배는 2월 국회의 특별법 처리 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 국회 행안위는 12일 소위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에 회부되고,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도 통과 되면 광주·전남은 40년 행정 경계를 넘어 새로운 체제로 들어서게 되고, 반대의 경우 통합 논의는 다시 시간을 두고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설 연휴기간 귀성 15일 오전 귀경 17일 오후 교통 혼잡

설 연휴기간 귀성은 15일 오전, 귀경은 17일 오후에 차량이 가장 몰리고 이동시간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18일 엿새간을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은 15일(서울→광주 5시간 30분, 서울→부산 7시간), 귀경은 17일(광주→서울 8시간 50분, 부산→서울 10시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귀성 방향은 작년보다 최대 소요 시간이 15분, 귀경방향은 1시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15일부터 4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최종 확정

부인 이순자·아들 전재국에 7000만원 배상 명령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펴 낸 회고록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보오 신부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을 적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보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보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제기된 뒤 9년만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들은 당시 전씨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역사적 책임을 묻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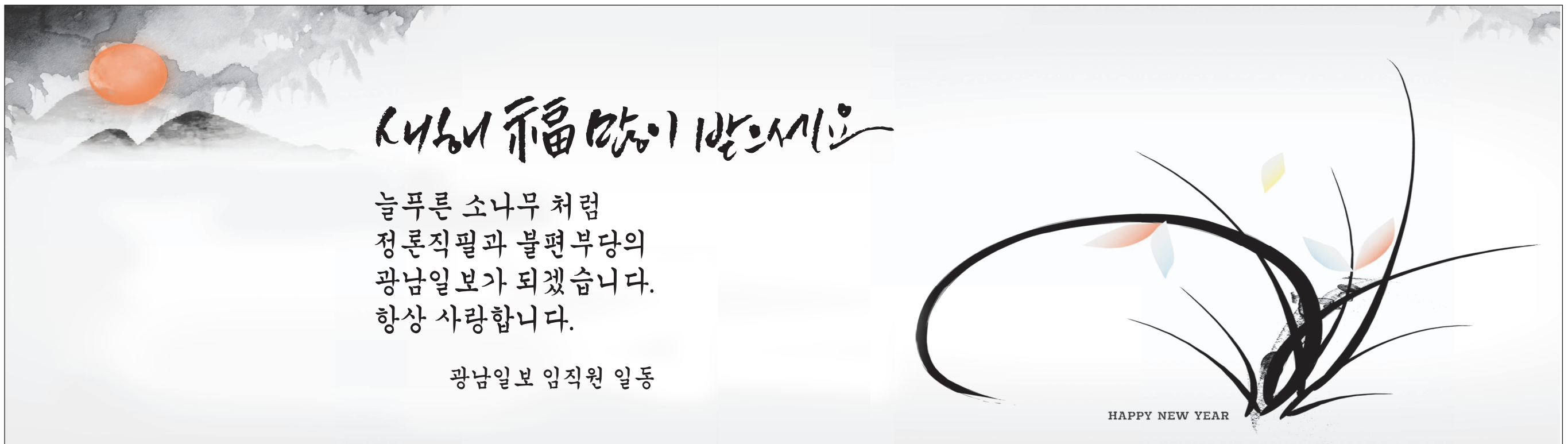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보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진행중에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광주지역사회는 이날 대법의 판단에 대해 “준엄한 법적 단죄”라며 환영했다.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전두환 회고록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역사 조작을 시도했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며 “역사의 진실은 꺾이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이 전두환의 5·18에 대한 역사왜곡과 폄해, 자기합리화 시도에 대하여 엄정한 단죄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푸른 소나무 처럼
정론직필과 불편부당의
광남일보가 되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광남일보 임직원 일동

HAPPY NEW YEAR